

■ 정복 경찰관 때리면 구속…생활 속 법치질서 확립대책 마련

경찰은 8월 공무집행 방해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내용 등의 '생활 속의 법치질서 확립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직접적인 유령력을 행사하면 일선 경찰서 강력팀이 현장에 출동해 피의자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폴리스라인을 법질서 확립의 기준으로 삼아 침범행위만으로도 현장에서 검거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경찰은 또 자정 이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방안을 공론화하기로 결정했다.

교통질서확립에서도 단속은 무인장비가 많고 경찰관은 정체해소와 같은 대국민 서비스에 집중하기로 했다. 5천839대인 무인장비를 2017년에 7천 대까지 늘리고, 교차로 꼬리물기를 단속하는 무인장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단속도 '대로 차단형 단속'에서 '스팟 이동식 단속'으로 바꿨다.

아울러 교통, 건설, 소방, 시설물, 에너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5개 분야의 안전비리를 적극 수사하기로 하는 한편 동네 조폭과 동네건달 등도 엄정하게 수사하고 조직폭력배는 운영 자금 출처와 형성과정을 심도 있게 수사해 범죄수익을 몰수·과세함으로써 조직 자체의 와해를 꾀하기로 했다.

■ 서울경찰청장 이상원, 경찰청 차장 이철성

정부는 12월 22일 치안감 이상의 경찰고위직 31명에 대한 전보·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경찰의 2인자로 꼽히는 서울지방경찰청장에 이상원 경찰청 차장이 전보됐고, 나머지 치안정감 5자리는 모두 현직 치안감이 승진됐다.

부산청장에 이상식 대구청장, 인천청장에 김치원 경북청장, 경기청장에 정용선 경찰청 수사국장, 경찰청 차장에 이철성 청와대 치안비서관, 경찰대학장에 백승호 전남청장이 각각 승진했다.

이번 인사로 치안총감인 강신명 경찰청장을 포함해 치안정감 이상 고위직 7명의 절반 이상을 경찰대 출신이 차지, 경찰대 출신의 경찰 조직 장악이 두드러졌다.

또 기존 경무관 10명을 치안감으로 승진시키는 등 치안감 24개 직위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했다. 승진자는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에 박재진 경찰청 대변인, 경찰청 수사국장에 박진우 경찰청 수사기획관, 경찰청 정보국장에 김상운 경기청 1부장, 경찰청 외사국장에 이상정 경남청 1부장, 청와대 치안비서관에 박화진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 등이다.

또 서울청 차장에 이상철 서울청 경비부장, 광주청장에 강인철 경찰청 정보화장비정책관, 울산청장에 이주민 경찰청 정보심외관, 경기청 1차장에 이기창 서울청 교통지도부장, 제주청장에 이재열 서울청 보안부장 등이 각각 승진됐다.

치안감 전보 인사에서는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에 최종현 광주청장, 경찰청 경비국장에 이승철 제주청장, 경찰청 보안국장에 김귀찬 대전청장, 경찰교육원장에 강성복 경기청 1차장, 중앙경찰학교장에 김양제 충남청장 등이 수평 이동했다.

이어 대구청장에 허영범 경찰청 보안국장, 대전청장에 김덕섭 경찰교육원장, 경기청 2차장에 서범수 울산청장, 강원청장에 이종구 경찰청 경비국장, 충남청장에 장항진 서울청 차장, 전남청장에 박경민 중앙경찰학교장, 경북청장에 조희현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경남청장에 조헌배 경찰청 정보국장 등이 전보·내정됐다.

경찰은 고위직 인사에 이어 경무관 승진·전보 인사, 총경 승진·전보 인사도 연달아 단행했다.

국회

■ 제331회 임시국회

제331회 임시국회는 2015년 2월 2일부터 3월 3일까지 30일간 열렸다. 이 기간 본회의는 8차례 개최돼 법률안 179건, 동의(승인)안 8건, 결의안 9건, 선출안 4건, 주요 동의 3건 등 20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상임위 전체회의는 64회, 287시간 28분 동안 진행됐다.

국회는 2월 16일 본회의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재적 281인 가운데 찬성 148인, 반대 128인, 무효 5인으로 가결시켰다.

3월 3일 본회의에서는 이경숙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과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 비리를 감시·적발하는 임무를 수행할 특별감찰관 후보로 이석수, 임수빈, 이광수 변호사 추천안을 각각 가결했다.



▲ 정의화 국회의장이 3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 가결을 선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또 '김영란 법'으로 불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재적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가결시켰다. 다만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은 부결됐다.

새누리당은 2월 2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유승민 의원을 원내 대표로, 원유철 의원을 정책위의장으로 선출했다.

■ 제332회 임시국회

제332회 임시국회는 2015년 4월 7일부터 5월 6일까지 30일간 열렸다. 이 기간 본회의는 9차례 개최됐다. 총 41시간 9분간 진행된 본회의에서 169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본회의 기간 위원회 전체회의는 7차례, 279시간 25분간 진행됐다.

본회의 첫날인 4월 7일에는 박상옥 대법관의 인사청문회가 열렸고, 4월 14일 5차 본회의에서는 아베 정부의 독도 영유권 침탈 및 고대사 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의결했다. 4월 16일 7차 본회의에서는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4월 30일 8차 본회의에서는 네팔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지원 촉구 결의안과 국민권익위원회 전준경 위원 추천안을 의결했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재석의원 190명 가운데 184명 찬성, 6명 기권으로 가결됐다.

5월 6일 9차 본회의에서는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새누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여야는 332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5월 6일 공무원연급법 개정안도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공적 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안'이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부결되면서 본회의를 속개하지 못해 처리가 무산됐다.

제331회 임시회 폐회 기간 중에는 국무위원 인사청문보고서도 대거 채택됐다. 3월 9일에는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10일에는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11일은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 13일은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고 17일에는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의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

3월 12일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이 당선무효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고, 4월 29일 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오신환·안상수·신상진 의원,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새로 당선됐다. 이에 따라 교섭단체별 의석수는 재석의원 298인 중 새누리당 160인, 새정치민주연합 130인, 정의당 5인, 무소속 3인이 됐다.

3월 17일에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선거구 재획정 문제 등 20대 총선 물줄을 논의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 위원장에는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 여야 간 시에는 새누리당 정문헌·새정치민주연합 김태연 의원이 선임됐고, 총 20명의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됐다.

■ 제333회 임시국회

제333회 임시국회는 2015년 5월 11일부터 29일까지 19일간 열렸다. 이 기간 본회의는 3차례 개최해 2시간 28분간 진행됐고 235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5월 12일 1차 본회의에서는 연말정산 추가 환급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과 상가 권리금의 보호를 골자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됐다. 또 3~5세 유아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 확대를 위해 1조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내용의 지방채정법 개정안도 재석 의원 244명 가운데 찬성 202표, 반대 13표, 기권 29표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역사 왜곡과 반인권적 행태를 비판하는 '침략역사 및 위안부에 대한 반성 없는 일본 아베 총리 규탄 결의안'과 '일본 정부의 조선인 강제 징용 시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규탄 결의안'도 채택됐다.

여야는 5월 28일 지도부 회동과 최고위원회의, 의원 총회 등을 소집하며 진통을 거듭한 끝에 5월 29일 새벽 3차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급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46명 가운데 찬성 233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행정기관은 이를 처리하고 소관 상임위에 보고토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또 흡연 억제와 금연 유도를 위해 담뱃값 경고그림·문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과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독립기구로 뒤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토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아울러, 선박운항자의 음주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해상안전법 개정안,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협박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 제334회 임시국회

제334회 임시국회는 2015년 6월 8일부터 7월 7일까지 30일간 열렸다.

이 기간 본회의는 8차례 개최해 41시간 5분간 진행됐고, 황교안 국무총리 임명동의안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확산 및 대책에 대한 긴급 현안 질문 등을 포함해 법률안 62건, 동의안 4건, 결의안 4건, 주요 동의 5건 등 총 7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여야는 6월 8일 1차 본회의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과 대책에 대한 긴급 현안질문을 열고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와 허술한 방역 체계 등을 질타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메르스 사태에 대한 효율적 대처를 위해 '국회 메르스대책 특별위원회'를 여야 동수로 구성해 7월 31일까지 운영기로 했다.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실시됐다. 6월 18일 2차 본회의에서는 황교안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재석의원 278명 가운데 찬성 156명, 반대 120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6월 25일 7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임시회 때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야당의 반발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책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 처리를 제외한 모든 의사일정은 모두 스톱됐다.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당·청관계가 냉각되고 화살은 협상의 최종 책임자였던 유승민 원내대표에게로 돌아갔다.

새누리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 처리 방안을 논의했지만 재의결하지 않기로 당론을

확정해, 국회법 개정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에 돌입했다. 다만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재신임 결정을 내렸다.

국회는 7월 6일 8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 재의안은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에 따라 128명만 투표에 참여해 재적 과반수 미달로 표결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 결국 국회법 개정안은 19대 국회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되게 됐다.

이후 본회의는 야당이 국회법 개정안 재의 무산에 반발해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새누리당 단독으로 진행됐고, 소액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 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일명 크라우드 펀딩법) 등 6건의 법률안이 가결됐다.

■ 제335회 임시국회

제335회 임시국회는 7월 8일부터 8월 6일까지 30일간 열렸다. 이기간 본회의는 총 2차례, 5시간 32분 동안 열렸고 법률안 62건, 동의(승인)안 4건, 결의안 4건, 주요 동의 5건 등 모두 75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7월 9일 1차 본회의에서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이 있었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설총 의원이 사임한 뒤 박주선 의원이 새로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또 김동철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이 사임한 자리에는 노영민 위원장이 새로 선임됐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로 불거진 박근혜 대통령의 불신임 논란 끝에 사퇴했다. 새누리당은 6월 25일 의원총회에서 유 원내대표에 대해 사실상 재신임 결정을 내렸지만, 이후 친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사퇴 요구가 이어졌다.

7월 6일 표결 불발로 국회법 개정안이 사실상 폐기 수순에 돌입한 뒤인 7일 새누리당은 유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 논의를 위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으며, 8일에는 유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를 열어 사퇴 권고를 결정했다.

김무성 대표로부터 의총 결과를 직접 전달받은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시 기자회견을 통해 사퇴를 공식화했다. 새누리당은 이후 7월 14일 의원총회를 통해 공식이 된 원내대표 자리에 원유철 의원을, 정책위의장에는 김정훈 의원을 선출했다.

7월 24일 2차 본회의에서는 원유철·정두언 의원이 각각 국회 운영위원장과 국방위원장으로 새로 선임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이 203명 투표에 찬성 199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각종 금융 불공정 행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사법경찰관리 직무수행자와 직무범위 관련법' 개정안과 난폭운전을 하면 최대 징역 1년 이하의 형사처벌을 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재·보궐선거를 연 1회로 축소시키는 선거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및 가뭄 피해 대책 등을 위한 총 11조5천63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도 재석의원 207명 가운데 149명이 찬성, 23명이 반대, 35명 기권

으로 통과됐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11조8천278억원)에서 2천638억원 줄어든 것이다. 정부안 가운데 세입경정 5조6천75억원은 2천억원 삭감됐다. 세출증액 6조2천203억원은 4천750억원이 삭감되고 4천112억원이 증액돼 정부안보다 638억원 손감했다.

세출 측면에서 감액된 4천750억원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2천500억원,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 올린 사업 1천810억원, 기타 440억원이다. 감액 재원 중 4천112억원은 메르스 사태 및 가뭄 피해 지원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쓰인다.

■ 제336회 임시국회

제336회 임시국회는 8월 7일부터 31일까지 25일간 열렸다. 이 기간 본회의는 2차례, 2시간 34분 열려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 등을 심사했고 법률안 12건, 동의(승인)안 1건, 결의안 8건, 선출안 1건 등 총 2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8월 11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이 헌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선출안이 가결됐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관련 감사요구안'을 심의·의결됐다.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뉴스테이법)도 재석 의원 188명 가운데 찬성 126명, 반대 37명, 기권 25명으로 통과시켰고, 군 관련 법안 8개(군인사법 개정안, 군무원인사법 개정안, 군인연금법 개정안,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군사기밀 보호법 개정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 방위사업법 개정안)도 일괄 처리했다.

8월 13일 2차 본회의에서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을 규탄하고 정부의 단호한 대응책을 주문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찬성 137인, 반대 89인, 기권 5인, 무효 5인으로 가결됐다. 임시회 중인 8월 20일에는 한명숙 의원이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 제337회 정기국회

• '100일 대장정'...19대 마지막 정기국회 개최

제337회 정기국회는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 열렸다.

이 기간 본회의는 총 15차례, 47시간 30분간 열렸고 예산안 3건과 결산안 1건, 법률안 241건, 동의(승인)안 27건, 결의안 13건, 선출안 2건, 주요 동의 8건 등 295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위원회 전체회의는 159차례 620시간 27분 열렸고, 소위는 177회 1천100시간 2분 동안 진행됐다.

• 정부 결산안·대법관 인준안 등 처리

9월 8일 4차 본회의에서는 2014회계연도 결산안이 법정시한을 일주일 넘겨 처리됐고 이기택 대법관 임명동의안도 가결됐다. 그러나 통합진보당 경색으로 논란이 됐던 박영희 국가인권위원회(비상임) 후보자 선출안은 부결됐다.

10월 12일 5차 본회의에서는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

아은 무소속 심학봉(경북 구미갑) 의원의 의원직 사퇴안이 재석 248명 중 찬성 217명, 반대 15명, 기권 16명으로 가결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고시를 행정예고한 데 반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날은 또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법정시한(10월 13일)을 하루 앞둔 상태였지만, 획정위가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고 발표하면서 법정 시한 내 선거구 획정은 무산됐다.

• **차대통령 시정연설 참석...野 '모니터 인쇄물 시위' 등**

10월 27일 10차 본회의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이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시정연설에는 참석했지만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항의하는 문구를 모니터에 붙이는 방법 등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했고, 이 때문에 시정연설이 15분간 지연되기

도 했다.

11월 12일 1차 본회의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의원이 신임 국회 국토위원장으로 선임됐고, 김태현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안도 가결됐다.

무정점 법안 37건이 상정돼 전통시장 주변에 대형마트의 입점을 금지하는 현행 규제를 앞으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원자력발전소 관련 시설의 전산망을 해킹하면 최단 1년에서 최장 10년까지 징역형을 내리는 '원자력 시설보호·방사능방재대책법' 개정안, 특허 소송 관할권을 특허법원(2심)과 고등법원이 위치한 일부 지방법원(1심)이 담당하게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민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또 사흘 남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을 12월 15일 까지 한 달 연장하는 내용의 정개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도 의결했다.

이날 여야 지도부는 선거구 획정을 놓고 사흘 연속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법정 시한(11월 13일) 내 선거구 획정이 무산됐다.

11월 30일 12차 본회의에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됐다. 2014년 11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北京) 정상회담에서 협상 타결을 선언한 지 1년여 만에, 양국 정상이 정식 서명한지 약 6개월 만이다.

여야는 이날 또 한·베트남 FTA와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 한·터키 투자·서비스 협정 비준동의안도 함께 처리했다. 국회는 파리 테러공격 규탄결의안은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 **내년 나라살림 386조4천억원...예산안 법정시한은 못 지켜**

12월 2일과 3일로 이어진 13차·14차 본회의에서는 2016년도 예산안이 진통 끝에 처리됐다. 여야는 당초 오후 2시 본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예산안 최종 규모 조정과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한 이견으로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늦어졌다.

여당은 예산안과 쟁점법안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야당은 예산안만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예산안은 법정처리시한(12월 2일)을 넘겨 3일 0시 48분에야 처리됐다.

2016년도 예산안은 약 386조4천억원으로 2015년보다 11조원(2.9%) 늘어난 규모다. 정부가 제출한 386조7천59억원보다 3천62억원 순삭감된 규모다


최대 쟁점이었던 유아 무상보육(3~5세 누리과정) 예산은 여야 합의에 따라 예비비로 3천억원을 지방교육청에 지원하게 됐다. 복지 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보육·육아 지원을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 예산이 5천억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

주요 삭감은 일반·지방행정 분야에서 1조4천억원이 삭감됐고, 국방 분야와 예비비에서 각각 2천억원씩 깎였다. '대통령 관심사업'으로 불린 나라사랑 정신 계승·발전 예산이 100억원에서 80억원으로 깎였다.

야당이 삭감을 벌렸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산과 여당이 깎으려 했던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예산은 원안이 유지됐다.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던 5개 쟁점법안, 즉 관공진흥

박대통령 '201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주요 내용



예산안


- 내년은 경제체질 바뀌 혁신성과 구체화하는 해
- 4대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 창조경제·문화융성 두축으로 경제도약 일자리창출
- 국민안전전을 위한 예산에 14조8천억원 투입
- 전체 예산의 30% 이상을 복지 분야에 투자
- 청년고용절벽 해소와 안정적인 가계소득 기반 확충을 위해 일자리 예산 12.8% 늘려 15조8천억원으로 편성
- 청년일자리 예산 20% 이상 확대
- 가계의 주거비와 양육비 부담 줄이기 위한 투자 강화
- 대북 억제 전력을 중심으로 국방역량 크게 강화
- 이산가족 생사확인고 상봉 정례화 위해 모든 노력

법안처리

- 경제활성화 법안 수년째 국회계류, 가습 타들어가
- 노동개혁 5대 법안 처리 간곡히 요청
-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줄 것 당부

역사교과서

- 올바른 역사교과서 통해 국론 통합하고, 아이들에게 자부심과 정통성 심어주도록 노력
- 역사왜곡·미화 교과서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
- 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어
- 집필안된 교과서 두고 더이상 왜곡·혼란 없어야



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대리점거래 공정화법·모자보건법·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법도 함께 통과됐다.

국회는 종교인 과세를 명문화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67석 가운데 찬성 195, 반대 20, 기권 50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목사, 신부, 스님 등 종교인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됐다.

2016년 도입되는 '만능계좌'라 불리는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SA)의 비과세 혜택을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경우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과 부모와 10년 이상 함께 산 무주택 자녀가 집을 물려받을 때 내는 상속세 공제율을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의…무쟁점 법안 110여건 의결

12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무쟁점 법안 110여건이 처리됐다. 벌금형에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이른바 '장발장법'을 처리하고 헌법재판소의 간통제 위헌 결정에 따라 형법에서 간통제를 삭제했다.

군대 내 인권문제를 상시 감독하는 군(軍) 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안'과 공무원 중 다친 군인이 군병원에서 제대로 진료를 못 받아 민간병원에서 요양을 받는 경우 치료가 끝날 때까지 진료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도 가결 처리됐다.

그러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새누리당은 이들 법안 처리를 위해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정기회 기간 중 새누리당 송광호, 조현룡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잃었다.

■ 제338회 임시국회

제338회 임시국회는 12월 10일부터 2016년 1월 8일까지 30일간 열렸다. 이 기간 중 본회의는 3차례, 11시간 38분 열렸고 법률안 279건, 결의안 1건, 선출안 1건, 주요 동의 1건 등 총 282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12월 28일 1차 본회의에서는 성폭력 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장교·준사관·부사관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군인사법 개정안과 도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도 무조건 토지거래 허가 대상에 묶이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여객기 내 소란 등 불법행위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항공보안법 개정안, 일명 '땅공회항방지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12월 31일 2차 본회의에서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시간강사법)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재개정안과 예술인복지법 개정안, '보복운전'을 해 형사처벌을 당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매 맞는 교사'와 같은 교권 침해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특별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또 동물실험을 통해 만든 화장품을 유통·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안,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확산에 대비하는 내용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폴크스바겐처럼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설계를 조작한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안심번호'를 활용한 당내 경선을 할 수 있게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212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기간 중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정당

새누리당

■ 개요

새누리당은 2015년 당·청 갈등으로 2명의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 과정에서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진실한 사람을 뽑아 달라'는 국민심판론을 들고 나와 '진박(진실한 친박근혜)' 논란이 일어났다.

'성완중 리스트' 파문이라는 대형 악재 속에서도 4·29 재보궐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 총 4개 선거구 가운데 서울 관악을, 인천 서·강화을, 경기 성남중원 등 3곳에 승기를 꽂았다.

당내 격론 끝에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준다는 취지로 20대 총선부터 안심번호를 활용한 '상향식 공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상향식 공천제한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 과정에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뜻한다.

차기 총선을 앞두고 강창희(6선)·이한구(4선)·김태호(재선)·김희선(초선)·손인춘(비례) 등 당 소속 현역의원 5명이 불출마 선언을 했다. 문대성(초선)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다가 번복했다.

11월 22일 새벽 거산(巨山) 김명삼 전 대통령이 패혈증과 급성심부전으로 서거한 데 이어 12월 14일에는 두 차례 국회의장을 지낸 8선의 이만섭 전 의원이 별세했다.

■ 성완중 전 경남기업 회장 자살…'금품 메모' 파문

해외자원개발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던 성완중 전 경남기업 회장이 2015년 4월 북한산 형제봉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성 전 회장의 몸에서는 정치인 8명의 이름과 일부 금품 제공 내역을 적은 메모지가 나왔다.

이른바 '성완중 리스트'로 회자된 이 메모지에는 '김기춘(10만 달러), 허태열(7억), 홍준표(1억), 부산시장(2억), 홍문종(2억), 유정복(3억), 이병기, 이완구'라고 적혀 있었다.

성 전 회장이 목숨을 끊기 직전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에게 금품을 줬다는 주장이 경향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면서 이완구 국무총리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성 전 회장은 인터뷰에서 이 총리에게 3천만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